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02
•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03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22
• 동북지구, 3년 연동 진흥 방안 실시	23
• 장쑤성(연청)한중산업단지의 “1원(園) 3구(區)” 구축	24
• 산둥성, 인도적인 닭 도축규정 도입	27
• 중국, 7개 지구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29
• 도농 일체화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실시	31
현대중국의 이해	34
• 장정(長征)	35
충청중국포럼 소식	42
• 제13 · 14 · 15회 충청중국포럼	43
발간목록	56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I. 문제 제기

1. 중국 굴기(崛起)와 충남의 신성장 동력

◆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했던 지난 수십년간 충청권 지역의 성장동력은 크게 ‘한중 수교(1992.8)’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경부축의 한부분인 서울-천안-대전축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의 성장과 급효과를 충남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흡수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중 수교 이전 또는 수교 직후까지의 시기로, 서해를 통한 한중간 인적 물적 교역·교류가 거의 없던 때였다. 이 시기 충남의 주요 지역경제기반은 수도권 기능분산과 억제정책에 따른 규제를 피해 입지한 산업기능이었다.

둘째 단계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충남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서해안 시대’, ‘환황해경제권’ 또는 ‘동북아경제권’이란 용어가 화두로 대두되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후 2001년 12월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인천에서 전남 목포까지 연결 되는 서해안축을 형성하면서, 중국 동부연해지구와의 교역·교류를 통해서 신(新) 성장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 서해안 지역의 산업, 물류, 관광 등 영역

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계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기운이 형성되고 있다.

◆ 단,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소위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로 전환하면서, 7% 이하의 중속성장과 질적 관리, 내수시장 육성 및 수입대체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재와 부품의 대(對)중국 수출 특수에 의존해 온 충남경제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 또 한편에서는, 한중간의 교역·교류가 증대되고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통한 한-중-북 삼각교류 공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직접 교역·교류가 확대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인 압록강변의 신의주에서 안주-평양-남포를 거쳐서 경기만 북부의 해주와 개성, 그리고 인천-서울을 거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서해안축’의 형성 및 발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과제

◆ 환황해권 시대에 충남에 제기되는 임무와 과제는 변화와 동력의 발원지인 대(對)중국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환황해경제권의 실체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것은 그 핵심 동력의 발원지가 중국 동부 연해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 동력의 발원지인) 중국 동부연해지구와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충남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잠재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충남의 미래전망과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 이번 호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충남의 입장에서 ‘환황해권 시대 대(對)중국 전략’ 관련 내용을 분석 정리했다.

II. 중국 굴기와 환황해경제권

1. 환황해경제권의 형성 및 발전 동향

◆ 우선 중시해야 할 점은, 환황해경제권의 형성 및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분야에서 시작해, 정치, 군사,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동력이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우리 서해와 연접한 국가와 지역 간의 교역·교류를 촉진하면서 역내 소지역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 소위 ‘환황해경제권’이란,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우리의 서해와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¹⁾에 연접한 역내 국가 간에 지리적 인접성을 기초로 형성·발전하고 있는 소지역 시장권(市場圈) 또는 국지경제권(局地經濟圈)을 가리킨다.

◆ 최근 수십년간 우리나라 수출동향중 가장 주목되는 변화동향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지위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다.

2002-201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수출액 점유비중 변화추이를 보면, 미국시장은 2002년 20.2%에서 2015년에는 13.3%로 대폭 감소했고 일본시장도 2002년 9.3%에서 2015년에 4.9%로 반토막이 줄었다(〈표 1〉).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최대 흡수자로서, 이들이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미국과 일본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시장은 2002년 14.6%에서 2015년에는 26%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국가로의 수출액 점유비중은 2002년 11.1%에서 2015년 13.9%로 중국보다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 우리의 ‘서해’ 또는 ‘황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 독음인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로 표기한다.

◆ 이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 변화 흐름의 영향과 혜택을 가장 크고 강하게 받은 곳이 바로 충남이다.

2015년 충남의 수출액(671.2억 달러) 중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43.9%를 점했다. 이는 같은 시기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중국 점유비중(약 26%)의 약 1.7배이다(〈표 1〉).

〈표 1〉 한국과 주요 국가별 간 교역비중 변화추이(2002-2015)

(단위: %)

연도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2년	20.2	15.1	14.6	11.4	9.3	19.6	11.1	10.7
2004년	16.9	12.8	19.6	13.2	8.5	20.6	9.3	9.6
2006년	13.3	10.9	21.3	15.7	8.2	16.8	9.7	9.2
2008년	11.0	8.8	21.7	17.7	6.7	14.0	11.5	9.0
2010년	10.7	9.5	25.1	16.8	6.0	15.1	11.2	10.0
2012년	10.7	8.3	24.5	15.5	7.1	12.4	14.0	9.5
2014년	12.3	8.6	25.4	17.1	5.6	10.2	14.4	9.8
2015년	13.3	10.1	26.0	20.7	4.9	10.5	13.9	9.9

주: 아세안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이 같은 상황은, 충남에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추세에 부응하면서, 국민경제 안의 지방경제라는 기존의 충남경제의 틀을 깨고 나와서, 지방 층차(層次)에서 초국경(cross-border) 교류와 협력활동을 전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충남경제가 수도권과 경부축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서해안축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직접 교역·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 따라서, 충남은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형성되어 흘러오는 ‘외부동력’을 활용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발전, 그리고, 3농(농업, 농촌, 농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상향식 주민운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흐름과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중국 환보하이(渤海)지구의 발전동향

1) 중국 국가발전전략과 환보하이지구의 부상

◆ 중국의 환보하이(環渤海) 연해지구의 발전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동부연해지구내에서도 남북간 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중국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점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부터이다.

이 지구는 베이징-텐진을 중심축으로 산둥반도와 랴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한 보하이만(渤海灣) 연해지구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에 국무원이 텐진(天津)시가 제출한 ‘빈하이신구(濱海新區)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을 비준한 후에 텐진시의 경제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징진지(京津冀: 北京-天津-河北) 지구와 산둥성과 랴오닝성을 포함하는 환보하이(渤海)지구의 경제발전속도가 주강삼각주지구와 장강삼각주지구 보다 빨라지고 있다.

◆ 또한, 거시적 차원의 주요 국토발전축으로, 연해지구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및 지역간 연결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대륙교(大陸橋: land bridge)라고도 불리는 중국횡단철도(TCR)축과 장강(長江)축을 횡축(橫軸)으로 하고, 연해축, 하얼빈-베이징-광저우(哈京廣)축, 바오터우-쿤밍(包頭-昆明)축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양횡삼종(兩橫三縱)’의 발전축이 형성·발전 중이다(<그림 1>).

2)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지리적 범위와 개황

◆ 우리의 ‘서해’와 연접한 중국의 바다는 황하이(黃海)이고, 그 안에 산둥반도와 랴오둥(遼東)반도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이자 규모가 큰 만(灣)인 ‘보하이만(渤海灣)’을 포함하고 있다.

보하이만(渤海灣)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포함하는 화북평원(華北平原)과 북으로 랴오둥반도, 남으로 산둥반도와 접하고 있다. 환보하이 연해지구를 ‘환보하이(環渤海)지구’ 또는 ‘환보하이 경제권’이라고도 부른다.

◆ 환보하이(環渤海)지구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황하, 화이하(淮河), 하이해(海河) 3개 강의 유역과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황화이하이(黃淮海)지구’가 있다.

이 지구’는 3개 강 및 그 지류로 충적된 화북(華北)평원과 인접한 산동의 중남부 구릉과 산둥반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리장성, 남쪽으로는 퉁바이산(桐柏山), 다비에산(大別山), 서쪽으로는 타이항산과 위시푸뉴(豫西伏牛) 산지, 동쪽으로는 보하이(渤海)와 황하이(黃海) 연안지역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통계자료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환보하이지구’의 범위를 행정구역 구분에 기초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즉 징진지(京津冀)지구, 그리고 랴오닝성(遼寧省)과 산둥성 2개 직할시와 3개 성(省)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중국 전국 인구의 17.8%, 국토면적의 5.4%를 점한다.

환보하이지구내의 주요 중심도시는 베이징, 톈진, 선양(沈陽), 따리엔(大連), 지난(濟南), 칭다오(青島), 바오딩(保定), 스자좡(石家莊) 등이다.

◆ 최근에 중국정부가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발전전략을 중점 추진하면서,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환보하이(環渤海)지구’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새로운 산업구조 조정과 승급이 진행되고, 중국의 연해지구 개발·개방 정책의 무게중심이 남에서 북으로 이전하면서 혁신과 기술창신(技術創新)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이 지구의 발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톈진 빈하이신구와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 산둥반도남색경제구, 그리고 허베

이성 보하이(渤海)신구와 차오페이티엔(曹妃甸)신구 등은 중국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포함되었다.

이들 5개 경제구의 면적 합계는 총 약 12.7만km²로 광둥성 선전(深圳)경제특구의 64배, 상하이 푸둥신구의 10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표 2〉).

〈표 2〉 중국 3대 경제권별 경제구 현황비교(2015)

(단위: %)

경제권	경제구	면적(km ² , %)	경제총량(억위안, %)	산출밀도(억위안/km ²)
환보하이(環渤海)지구	톈진(天津) 빈해신구	2270(19.0)	9270(56.1)	4.1
	랴오닝(遼寧)연해경제지대	56500(38.2)	13576(47.4)	0.2
	산둥반도남색경제구	64000(40.5)	31395(49.8)	0.5
	허베이 차오페이티엔(曹妃甸)신구	1943(14.4)	349.5(5.7)	0.2
	허베이 보하이(渤海)신구	2375(1.3)	560(16.7)	0.3
주강삼각주지구	선전(深圳)특구	1997(1.1)	17503(24.1)	8.8
장강삼각주지구	상하이 푸둥(浦東)	1210(19.1)	7898(31.6)	6.5
	쑤저우(蘇州)공업원구	278(3.3)	2070(14.4)	7.5

주: ()는 소속 성, 시내 점유비중임

출처: CEIC 및 각 지역별 통계국

3)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발전전망과 과제

◆ 관건과제는, 충남경제가 국민경제의 틀을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는 외부의 발전동력을 어떻게 견인, 흡수할 것인가? 이고, 이중 우선과제는, 변화와 발전동력의 진원지인 중국의 발전동향과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환황해경제권’의 형성·발전이 진행되면서,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 최근에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을 주요 국가급 발전전략과 제로 선정하고, 장기발전 목표를 “강력한 비교우위를 보유한 세계급 도시군으로 구성된 신형 수도권(新型首都圈) 육성”이라고 설정했다.

특히 올해 초 중국정부가 수립 발표한 ‘13차5개년계획(十三五規劃: 2016- 2020)’에서는 ‘징진지’협동발전을 3대 지역발전전략중 하나로 제시한 바, 이것이 바로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 발전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둥성은 1990년대 초에 이미 ‘해상산둥(海上山東) 건설’ 전략을 제시했고, 2011년에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 확대에 중점을 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藍色經濟區發展規劃)’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하고, 해양경제 관련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충남의 미래전략에서 대(對)중국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전속도의 변화에 따라 기복은 있겠지만, 향후 일정기간 한중간 교역 및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서해안축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충남의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공간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지방 층차(層次)에서 한-중 교역 및 교류의 확대와 활성화에 따라, 중국을 통한 대(對)북한 삼각 교역 및 교류, 즉, 한-중-북 삼각교역 및 교류 공간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Ⅲ. 우리나라 정부와 충남도의 대응 현황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운송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10월에 발표한 구상으로,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고

속교통망과,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남북한간에 중단된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3대 철도망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북한 구간 철도시설을 개·보수하면서 한반도 철도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 ◆ 따라서, 충남의 입장에서 한반도 남반부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면서, 통일 이전의 남북한 교역·교류 활성화 단계부터 통일 이후에 구축·강화될 한반도종단철도망(TKR)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해 야기된 개성공단 철수 사태 등,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이 같은 구상의 실천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이 같은 상황은 남북관계의 회복과 긴장완화 국면에서 잠재력과 탄력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도 있다.

2. 충남의 현황과 과제

- ◆ 충남경제의 특징은,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상술했듯이 충남경제의 기본동력은 수도권 규제에 의한 반사이익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혜택 속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중심의 중국 특수 혜택이었다.

2015년 충남의 수출액 중 43.9%가 대(對)중국 수출이고, 타이완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시장 수출 점유율은 충남수출액의 3분의 2를 점한다.

- ◆ 그러나 최근에 들어, 국내에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중국경제는 중저속성장의 '신상태(新常态)' 기조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모두 자국과 상대국 내수시장 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충남경제구조의 대내·대외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충남의 주력산업은, 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이나,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에 거의 추월 당했고, 제철도 악화 추세이다.

- ◆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6개 시·군이 중국

의 황하이(黃海)로 연결되는 서해바다에 접하고 있지만, 해상운송과 항공교통 기반인 항만과 공항 기반시설의 수준이 국내 서해안 지자체중 가장 낮다.

특히, 항공교통의 경우, 전국 지자체중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

- ◆ ‘환황해권 시대’에 대응한 충남의 과제 또는 임무가 제시된 주요 동기, 그리고 현재와 향후 일정기간 성장동력의 최대 발원지는 중국이 될 것이므로, 충남의 대응전략은 응당 대(對)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對)중국 전략과 연결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전제는 ‘중국 제대로 알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충남의 ‘환황해권’구상은, 그 범위를 중국 대륙전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계획 및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중국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을 충남의 입장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Ⅳ.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1. 아는 만큼 보인다

- ◆ 왜, 최근에 들어, 중앙과 지방, 정부와 연구기구들이 유행처럼 미래 전망과 전략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 계획과 정책 수립의 전제이자 본래의 목적이 바로 중장기 미래 전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것 아닌가?

그 대답은, 중앙과 지방 구분없이 단기적 성과와 효율 추구에만 급급해 하는 기존의 계획과 정책 수립 틀과 시스템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 본질적 접근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방위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시스템 혁신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보다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충남의 미래 전망과 대책의 초점을 ‘중국’에 맞추고,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지구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지체되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한편,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일수록 그 진단과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밑에서 기본부터 짚으면서 가야 한다.

그 시작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교역·교류 대상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성(省), 시·현 단위 지방에 대해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보유한 비교우위와 능력, 잠재력을 기초로 현안사업과 연결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와 관할 시·군이 기존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 관계를 기초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온 대(對)중국 교류활동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대(對)중국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각 분야 및 부문별 현장에서 지역주민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실천적인 ‘작은 운동’들을 대(對)중국 전략과 연계시키면서, ‘충남형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림 2〉 2040년 서해안축과 충남

◆ 변화의 핵심동력이 서해바다 건너편 중국 동부연해지구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국가단위 국민경제권 밖에서 형성·발전하고 있는 ‘소지역경제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중앙과 수도권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하는 충남의 관건과제와 연결된다.

◆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응전략의 설계는 상호 호동(互動)적이어야 한다. 즉, 미래전략 설계는 미래전망을 근거로 하지만, 전략적 실천의 진행상황에 따라, 미래전망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환황해시대’라는 큰 흐름에 적응 편승하면서 충남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등 함께 흘러 들어오는 부정적 요인들에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향식으로 극복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 및 부문별로 제기되는 ‘환황해시대’에 따른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과제들은, 각 단일과제마다 적응과 극복이라는 양 측면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²⁾

◆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 구축 방향과 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황하이(黃海) 및 보하이(渤海) 연해지구 도시들과 우호협력 교류협작 관계를 구축·활성화 하면서, 중국과 연결한 지역발전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지체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선정하고,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남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기초로 현안사업과 연결해야 한다.

둘째, 현안과제와 사업들을, 자력추진 가능한 것과 중앙의 예산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화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지만, 그 실천은 동시에 병행 추진한다.

셋째,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기회와 함께 위협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즉, ‘환황해권 시대’라는 ‘큰 흐름’에 적응하면서, 이와 함께 들어오

2) 백낙청외, 2004,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289-291쪽.

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운동’들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상향식으로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위협이 중국의 대기오염과 황보하이(黃渤海) 환경문제이다. 1980년대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연평균 황사일수는 2.9일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9.8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 수치도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평균 권고기준인 $25\mu\text{g}/\text{m}^3$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³⁾ 따라서, 대기오염과 황보하이(黃渤海) 수질오염 등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및 녹색성장 지향의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견지해야 한다.

넷째, 한중 지방간 교류협력 확대가 한-중-북 지방차원 삼각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 방향은, 통일 후의 한반도가 현재의 남한과 북한 어느 쪽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對)중국전략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을 지방과 주민에 귀속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지자체중 3농혁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남의 비교우위와 축적된 경험을 대(對)중국 및 북한 교역·교류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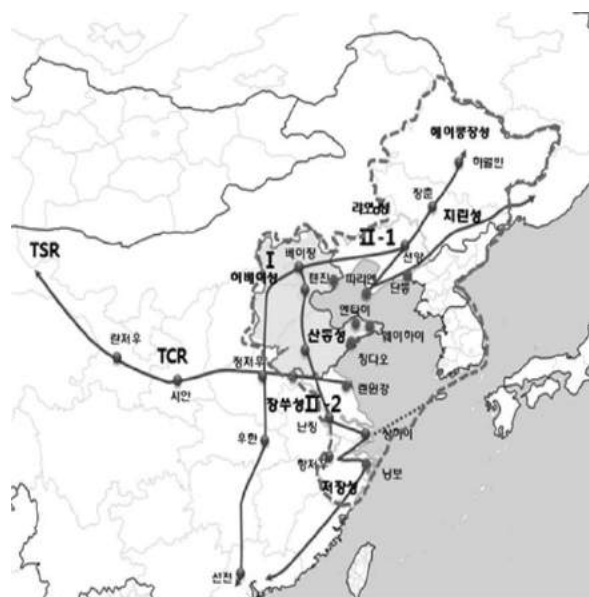
2. ‘환황해권’ 공간범위 설정

◆ ‘환황해권’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하고, ‘충남 특색의 대(對)중국 전략’을 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의 입장에서 ‘환황해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실제 연구사업과 프로젝트 추진 시에 ‘환황해권’의 범위는 그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또는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열도 서남부의 큐슈지역을 포함하기도 하고, 보다 더 넓게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전부와 동남아 지역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동북아시아 권역 전체 범위 안의 국가를 대상으로 총량적 추상적 수준에서 곁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3) 강택구, 2016: 57쪽.

- ◆ 다음 단계는,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맥락에서, ‘환황해권’ 내에서 중국내 전략적 타깃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중국내 전략적 타깃지역을 충남의 능력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구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 이러한 맥락에서, ‘환황해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의 서해와 접한 남북한 서해안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를 포함시킨다.



〈그림 3〉 환황해권 및 전략적 범위 설정(안)

단, 우선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에 접한 지구를 포함해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단기적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한반도 남부 서해안 지역(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과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 성(省)과 직할시 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한다(〈그림 3〉).

첫째,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지구와 산둥성 지구를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추진 대상 ‘제1권역’으로 설정한다. 이 중에서도 충남도와 20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인 허베이성과 충남도내 15개 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파트너 시(市)·현(縣)이 가장 많은 산둥성에 중점을 둔다. ‘제1권역’은 2015년에 총인구 약 2억 990만 명, 면적 약 37.5만km²이다.⁴⁾

4) 참고로, 2015년말 충청남도 인구는 208만명, 면적은 0.82만km²이고, 남한 총인구는 5156만명, 국토면적은 약 10만 km²이다.

둘째, 라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하는 동북3성지구를 2단계 1순위 타깃지역(Ⅱ-1권역)으로 설정하고 장쑤성(江蘇省)을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지구를 2단계 2순위 타깃지역(Ⅱ-2권역)으로 설정한다. 2015년 기준 동북3성지구는 총인구 약 1억 947만명이고 면적 약 80.8만km²이며, 장강삼각주지구는 총인구 약 1억 5930만명이고 면적 21.5만km²이다(〈표 3〉).

〈표 2〉 중국 3대 경제권별 경제구 현황비교(2015)

구분		1인당 GRDP (달러)	전국 순위	면적 (만km ²)	인구규모 (만명)	비고
중국 전국		8026	-	963.4	137,349	-
Ⅰ 권역 (징진진, 산둥성)	베이징	17064	2	1.6	2171	총인구: 2억 990만명 총면적: 37.5만km ²
	톈진	17334	1	1.2	1547	
	허베이성	6463	20	18.9	7425	
	산둥성	10302	10	15.8	9847	
Ⅱ-1권역 (동북3성)	랴오닝성	10520	9	14.8	4382	총인구: 1억 947만명 총면적: 80.8만km ²
	지린성	8325	12	18.7	2753	
	헤이룽장성	6336	21	47.3	3812	
Ⅱ-2권역 (장강삼각주)	상하이시	16560	3	0.6	2415	총인구: 1억 5930만명 총면적: 21.5만km ²
	장쑤성	14128	4	10.7	7976	
	저장성	12466	5	10.2	5539	

주: 전국 순위는 1인당 GRDP 순위임
자료: CEIC

3. 선택과 집중

◆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수립대상을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는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과 ‘징진진(京津冀)’지구내의 허베이성(河北省)과 20여년간 유지해 온 자매결연관계와 산둥성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큰 나라여서, 대부분 성(省)의 인구규모와 면적이 우리나라 전국 규모보다 크다는 점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우선,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주요 국가발전전략중 허베이성과 산둥성과 연관성이 높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협동발전과 환보하이(環渤海)경제권 발전, 남

색경제(藍色經濟) 발전, 그리고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전략의 틀 안에서 지방 층차의 구체적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계시킨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전략적인 역할분담체제 틀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사회단체와 기업이 각자 보유한 조건과 능력에 따라, 중국 현지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대(對)중국 교류 추진시, 의전과 형식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시각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허베이성의 수도인 스자좡(石家莊)시만 보더라도, 2015년말 기준 총인구 약 1,070만 명이고, 행정구역 면적은 1만 5848km²이고, 이중 농촌지구를 뺀 시구(市區)면적만 2206km²이다. 또한 스자좡시는 허베이성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정보의 중심지이며, 주요 공업은 면방직, 의약, 전자, 화공, 기계, 건축재료 등이고, 1인당 지역총생산(GRP)은 8,228달러이다.

◆ 우선 ‘징진지(京津冀)’ 지구가 중국의 중요한 내수소비시장권으로 성장, 부상하면서 신규 협력가능 분야가 창출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즉,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 지구의 산업구조 조정 진행과정에서 전자상거래, 환경보호관련산업, 해운, 관광, 문화 등 영역이다.

‘징진지(京津冀)’지구, 즉 베이징-톈진-허베이 지구는 최근 중국정부가 전국 지역발전정책의 거시적 틀과 목표로 제시한 ‘4대 구역(四大板塊)’과 3개 지지구(支撐區)⁵⁾ 중에서도 중점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징진지’협동발전을 주요 국가급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비교우위를 보유한 세계급 도시군이 자 신형 수도권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 수도인 스자좡(石家莊)시를 포함한 허베이성의 주요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통상 확대, 그리고 중국 화북(華北)지구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허베이성은 보하이만(渤海灣) 연해지구에 위치하고, 베이징-톈진과 함께 중국 수도권지구인 ‘징진지(京津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단, 내해(內海)인 보하이만(渤海

5) ‘4대 구역(四大板塊)’은 기존의 동부, 중부, 서부, 동북지구이고, 새로이 추가한 3개 지지구(支撐區)는 ‘장강(長江) 유역경제지대’와 ‘징진지(京津冀)지구’, 그리고 ‘육상경제지대(一帶)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路)’를 가리킨다.

灣) 안쪽에 연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해상운송거리가 산둥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 보다 멀고, 또한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연유로, 우리나라와 지방 차원의 교류가 산둥성과 랴오닝성(遼寧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베이성의 대외교류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다.

- ◆ 중국 국가해양경제발전전략 및 산둥성의 남색경제(藍色經濟)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적실한 틈새 찾기와 전략적 제휴 모색을 위한 대(對)중국 교류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둥성 남색경제 추진경험과 동향을 그 층위 및 층차별 내용으로 구분하고, 충남의 지역공간규모와 인구규모, 산업 및 경제 특성에 맞추어 분석·과약해야 할 것이다.

- ◆ 충남도가 충남 연해지역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립한 ‘충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5~2030)’에 제시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자력 추진 가능한 사업과 국비사업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중국 산둥성의 ‘남색경제’ 추진전략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원, 에너지,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1242 km 리아스식 해안과 357km²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갯벌, 천혜의 자연환경과 중국과의 거리 등 입지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의 자연환경조건과 입지 잠재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 한-중-북 삼각교류 확대와 한반도 서해안축 형성

- ◆ 중국의 단둥에서 북한의 신의주와 연결되는 축을 통해서 평양-남포축으로 연결되고, 다시 남쪽으로 해주와 개성을 거쳐서 경기만 북부와 서울-인천 수도권과 충남의 당진-서산-홍성-태안-보령-서천 지역을 거쳐서 새만금지구와 목포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서해안축’이 형성·발전될 것이다.

한중간의 교역·교류 증대는 중국을 통한 한-중-북 삼각 교역·교류를 확대 시킬 것

이고, 이는 다시 한-중-북 국가간 산업내 분업체계를 구축 및 확대할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랴오닝성 단둥(丹東)-신의주, 지린성(吉林省) 지안(集安)-만포와 투먼(圖們)-나선 통로 등 중-북 간 교역 및 교류를 통한 연결 축을 형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 한반도 남부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은, 지역경제 발전동력 창출과 함께, 서해바다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접근하는 공간을 넓히면서 남북한간 평화와 통일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택구(2016),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계와 도시, Vol.13: 56-65.
- 박인성(2015), “중국의 신형도시화 배경과 도시정책 동향”, 세계와 도시 Vol.10: 44-51.
- 박인성(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아카데미.
- 백낙청외(2004),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창비.
- 이대근(2004), “세계경제론-글로벌시스템의 형성과 전개”, 박영사.
- 박인성·유광철(2015), “충남도 대(對)중국 교류지역 연구(1)(전략연구 2015-26)”, 충남연구원.
- 박인성·이인배·강수현(2014),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전략연구 2014-31)”, 충남연구원.
- 이상준외(2010),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국토연 2010-19)”, 국토연구원.
- Francois Gipouloux, 龔華燕.龍雪飛역(2014), “亞洲的地中海(The Asian Mediterranean: 2011)”, 新世紀出版社.
- 孫久文·彭薇(2010), “我國城市化進程的特點及其與工業化的關係研究”, 區域與城市經濟(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 CEIC(<https://www.ceicdata.com/>).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비웨이닝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 1. 동북지구, 3년 연동 진흥 방안 실시
- ▶ 2. 장쑤성(연청)한중산업단지의 “1원(園) 3구(區)” 구축
- ▶ 3. 산둥성, 인도적인 닭 도축규정 도입
- ▶ 4. 중국, 7개 지구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 ▶ 5. 도농 일체화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실시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1. 동북지구, 3년 연동 진흥 방안 실시

- ◆ 2016년 8월 22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북지구 등 구 공업기지 진흥 추진을 위한 3년 연동 실시방안(推進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三年滾動實施方案)’을 발표했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7개 중대 프로젝트와 137항 중점 임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 ◆ 127개 중대 프로젝트는 주로 교통(철도, 고속도로, 항공, 전철), 에너지, 수리(水利), 공업, 농업, 도시·농촌 건설 등의 분야를 아우른다. 그 중에서 2016년 62개 프로젝트, 2017년 33개 프로젝트와 2018년 32개 프로젝트가 착공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북진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효율적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 ◆ 그리고 ‘실시방안’에서 체제(體制) 및 기제(機制)를 보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혁신창업을 장려하고, 주민생활 보장과 개선 등 4대 핵심임무를 중점적으로 설정하였다.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관리체제의 완비를 가속화시키고 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경제발전 추진 등 분양 공작임무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동북지

구 국유기업의 개혁 방안 제정과 실행을 동시에 하고 동북지구에서 일부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를 개편, 설립하며 일부 체제가 전환된 과학연구원과 벤처 기업에서 주주권과 분업의 장래 사업 실시 등 대책을 포함한다.

구조조정 추진 측면에서는, 전통산업의 개조를 추진하고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 분야 등의 임무를 명확하게 한다. 동북지구에서 ‘중국제조2025’ 도시시험과 시범 공작을 추진하고 일부 중요한 기술장비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동북지구 신흥 산업의 3년 육성과 발전 행동의 실시, 일부 구 공업기지의 산업 전형승급(轉型昇級) 시범구 또는 시범단지 설립 등의 대책을 포함한다.

혁신창업 장려 측면에서는, 인재를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며, 지역 혁신 환경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 동북진흥에 중요한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선양(沈陽)시의 전면적 혁신 개혁시험방안을 추진하며 선다(沈大: 선양과 다롄)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건설 추진 등의 방안을 포함한다.

주민생활 보장과 개선 측면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중대한 민생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시내의 구 공업기지과 독립적 공업과 광업단지를 이전하고 개조하며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이 고갈된 도시에 재정이전지불지원의 강도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포함한다.

2. 장쑤성(옌청)한중산업단지의 “1원(園) 3구(區)”구축

◆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중산업단지 설립 추진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어서 2015년 6월 1일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가 한중산업단지의 지방협력도시로 선정됐다. 2015년 10월 31일-11월 2일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한국 방문 기간 중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자유무역 구조에서 산업단지 협력에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다.

◆ 옌청시는 장쑤성에서 가장 큰 지급시(地級市)로서 장쑤성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황해에 접하는 도시이다. 지역 총면적은 14562km²이고 장쑤성 면적의 13.9%를 차지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3개 구(區), 1개 현급시, 5개 현(縣)을 포함하고 2015년 기준 거주 인구는 약 723만명에 달한다. 연청시는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편리한 해로(海路)와 공로(空路)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연청시는 장쑤성 한국기업 밀집구역으로서 (주)현대·기아, (주)현대모비스, (주)현대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 약 1000개가 입주해 있고 총투자금액이 50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연청의 최대 외자투자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연청시는 한국의 남원, 대구, 서울 성북구 등 지역과 우호도시 관계이고 현재 약 2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연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림 1〉 연청시 시내 모습

출처: 百度圖片

- ◆ 한중산업단지는 ‘1원(園) 3구(區)’로 구분되며 ‘1원’은 한중(연청)산업단지이고 ‘3구’는 핵심구, 주체구, 연동구이다. 핵심구는 국가급 연청경제기술개발구이며 주체구는 국가급 연청경제기술개발구, 성남신구(城南新區)와 따평항(大豐港)경제구이다. 또한, 연동구(聯動區)는 연청 시역(市域)의 10개 성급(省級) 이상 개발구 등을 포함한다.
- ◆ 한중산업단지는 연청과 한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고, 중국연해자동차단지(中國沿海汽車城), 한국기업공업단지(韓資工業園), 연청종합보세구, 연청미래과학기술단지(鹽城未來科技城), 한국사구(韓國社區), 국제미용건강단지(國際美容健康城), 생태스마트건강거주단지(生態智慧康居城), 연청항만, 연청공항, 한국민속원(韓國風情園)를 비롯한 10대 기능 플랫폼을 통해서 10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중산업단지의 10대 협력사업은 주로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인터넷+’ 산업, 스마트 장비제조산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건강미용산업, 빅데이터산업, 현대화 서비스업, 중형(重型) 첨단장비 제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이미 (주)기아, (주)현대모비스, 국제자동차시험장 등 자동차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생산액 목표 3천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 자동차 산업체인중 가장 완벽한 산업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은 장강삼각주 신에너지 자동차 연구원(長三角新能源汽車研究院)을 플랫폼으로 하여 기아자동차 등의 신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을 가속화하고,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펼치고, 자주적 지식소유권, 경량화(輕量化), 순수 전기 핵심기술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체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인터넷+’산업은 한국 ICT(정보통신) 등 미래 과학기술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클라우드 소싱(衆包), 클라우드 펀딩(衆籌) 등 신형 제도모델의 발전과 공업, 상업·무역업, 금융업 등 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스마트장비 제조산업은 “중국제조2025”, “한국 제조업 혁신 3.0” 등 전략의 기회를 잘 파악하고, 원격의료설비, 특수로봇, 공업용 로봇, 서비스업 로봇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제조풀세트 장비, 스마트 장비, 스마트 제어계측장치와 부품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키신다.

태양광발전산업은 광에너지(光能源), 광모니터(光顯示), 광조명(光照明) 등 3대 분야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며, 비교적 완비된 태양광 발전, LED조명산업 체인과 광모니터 산업 클러스터(集群)를 형성한다.

국제전자상거래산업은 옌청종합보세구의 우세를 발휘하고 한국 (주)롯데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전국에서 선도적 지역 상무(商貿)물류센터, 전자 상거래와 현대화 물류산업 융합 발전의 핵심 집결구를 수립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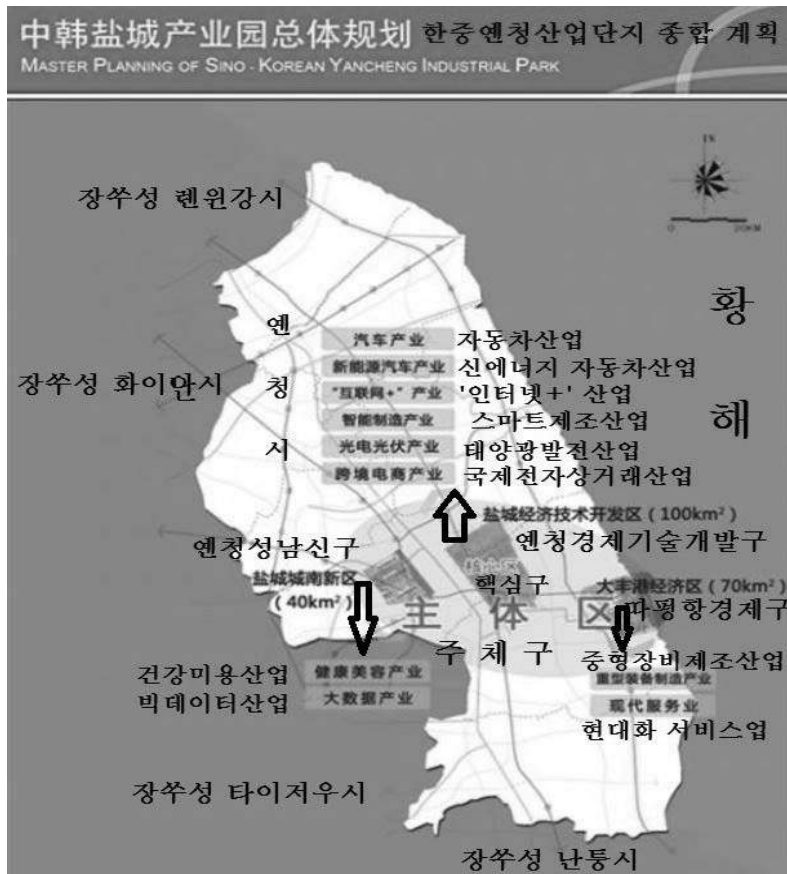
건강미용산업은 국제미용건강센터를 계획하고 건설하며 한국 (주)GCT 등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미용·옌청 브랜드(韓國美容鹽城品牌)”창조에 집중한다.

빅데이터산업은 10만㎡의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대용량 녹색데이터 센터, 중점산업 빅데이터 응용산업기지, 빅데이터 혁신 창업 육성기지를 수립한다.

현대화 서비스업은 자동차 서비스업의 육성을 둘러싸고 8개 자동차 서비스업 센터를 만들고 임항(臨港) 물류업, 첨단서비스업, 관광업, 문화혁신산업을 발전시킨다.

중형(重型) 첨단장비 제조업은 신에너지 풍력발전장비, 항만기계, 야금장비 등을

비롯한 중형 첨단장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형장비의 연구, 생산, 제조 기지를 적극 건설한다.



〈그림 2〉 한중염청산업단지 종합 계획

출처: 鹽城新聞網

3. 산둥성, 인도적인 닭 도축규정 도입

◆ 산둥성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닭의 인도적인 도축기술의 업종표준을 제정했다. 최근, 칭다오농업대학교 식품과학공정학부 손징신(孫京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제정된 산둥성 지방표준규칙인 “인도적인 닭 도축기술규범(肉雞福利屠宰技術規範)”을 발표했다.



〈그림 3〉 닭 도축 관련 삽화

출처: 百度圖片

- ◆ 이 규범에 따라서 닭의 도축, 운송, 하역 등 과정 중에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닭을 잡을 때 뒷발을 사용하거나 날개를 두 쪽 모두 잡아야 한다. 날개를 한쪽이나 다리를 잡으면 안 되고 닭을 바닥에 끄는 행위도 금지한다. 운송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온도와 위생환경에도 주의해야 한다. 도축 전에 정양(靜養)해야 하고 가슴안마시트를 설치한 후 닭을 안정시켜야 한다. 도축할 때 기계 등 방식을 통하여 닭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해야 한다.
- ◆ 중국 육계(肉鷄)가공의 산업화는 늦게 시작되었고 도축기술 또한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계 도축 가공과정 중 개체 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받으며 닭고기 혈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중국의 닭고기 및 연관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웠다. 현재, 산둥성 육계 양식 수량이 중국 전국의 20% 이상 차지하고 전국 1위를 점유하며 중국 육계산업 수출점유율 50%에 달하여 뚜렷한 지역우세를 가지고 있다. 이 업종표준을 통해서 육계의 인도적 도축이 표준화 가공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산둥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닭의 인도적인 도축기술의 업종표준을 제정하여 육계 표준화 가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표준의 재정을 통해서 산둥 및 중국 전국의 육계 산업에 인도적 표준화 도축 가공을 추진하고 가공기술수준을 진일보 제고시키고, 닭고기 품질안전관리의 국제표준 통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4. 중국, 7개 지구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 최근, 중국정부는 상하이시 푸둥(浦東)신구의 자유무역시험구, 광둥성 광저우(廣州) · 선전(深圳) · 주하이(珠海)의 자유무역시험구, 톈진시 빈하이(濱海)신구의 자유무역시험구, 푸젠성 푸저우(福州) · 샤먼(廈門) · 핑탄(平潭)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랴오닝성(遼寧省), 저장성(浙江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慶市), 쓰촨성(四川省), 산시성(陝西省) 등 7개 성시(省市)의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각 지구(地區)별 목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선양(瀋陽)과 다롄(大連)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시장 규칙에 의거하여 동북 구(老)공업기지의 체제 및 기제(機制)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동북 구공업기지 발전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개방 수준의 신엔진을 제고시킨다.

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저우산(舟山)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저우산자유무역항지구(舟山自由貿易港區)의 건설을 추진하고 벌크화물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며 벌크화물상품의 글로벌 배치 능력을 개선시킨다.

허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정저우(鄭州), 뤼양(洛陽), 카이펑(開封)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남-북 지역을 관통하고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현대화 입체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복무(服務)하기 위한 현대화 종합교통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우한(武漢), 이창(宜昌), 상양(襄陽)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중부지역에서 연해지역으로의 이전 산업을 연결하여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구축하고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과 장강경제지대(長江經濟帶) 전략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충칭시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목적과 임무는 충칭시의 전략지점(支點)과의 연결점(連接點) 역할을 발휘토록하고 서부지역 관문(門戶)도시의 개방 역량을 강화하고 서부대개발전략의 추진을 선도적으로 인도한다.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청두(成都)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서부지역의 관문도시의 개방 역량을 제고시키고 내륙지역 개방 전략의 지탱지대를 건설하며 내륙개방형 경제고지(高地)를 구축하고 내륙지역과 연해(沿海)·연변(沿邊)·연강(沿江) 등 지역 간 협동하고 발전을 추진한다.

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로 시안(西安), 셴양(咸陽) 등 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과 임무는 ‘일대일로’ 전략이 서부대개발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돕고 서부지역의 관문도시의 개방 역량을 제고시키며 내륙개방형 경제고지를 구축하고 내륙지역과 ‘일대일로’ 주변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신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 ◆ 한편,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신규 설립된 7개 자유무역시험구는 고수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과 부합하고, 넓은 분야 및 더 큰 범위에서 시험구마다 특별한 특색과 각자 다른 시범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각각의 특징을 보유할 것이라 하였다.



〈그림 4〉 중국 자유무역구 배치도

출처: 百度图片

5. 도농 일체화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실시

◆ 2016년 10월 9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전국 위생 및 건강대회 정신 학습과 관철에 관한 통지(關於深入學習貫徹全國衛生與健康大會精神的通知)”를 발표했다. 이 “통지”를 통해 도농 기본의료보험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2016년 말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통합 방안을 공포하고, 2017년부터 통일된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 지불기제와 이익 조정기제를 제시하고 시민들이 질서 정연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병원에서 합리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비용을 통제하여 합리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병원을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규범 행위와 비용을 통제한 내생동력(內生動力)을 양성한다.

둘째, 의료보험의 조달과 대우 조정기제를 제고하고 경제사회발전 수준과 각계의 부담능력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속가능한 의료보험 조달기제를 구축하고, 조달 수준에 맞춘 기본의료보험 대우 조정기제를 도입한다.

셋째, 도농 주민의 중병 보험제도를 갖추고 건강 구빈(扶貧)프로젝트를 심도(深度) 있게 실시하며 적극적인 의료보험정책을 추진·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의료보험, 의약 간의 연동(三醫聯動) 개혁 추진, 등급진료제도 수립, 홈닥터 계약서비스를 추진하고, 공립병원의 개혁을 지지하고 의료비용의 인상을 억제하고, 약품공급보장제도를 건립하고 합리적 약품가격기제를 탐구·건립한다.

◆ “통지”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의료보험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 지역과의 직접 의료결제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성(省)별 지구 간 퇴직인원의 입원비를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하고, 2017년 말까지 진료자격을 갖춘 환자의 타 지역 입원비를 병원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의료보험처리기제를 도입하고 처리모델을 혁신화하고 다각화 경쟁구조 형성을 장려하고 의료보험 처리업무의 효율과 질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의료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보수(報酬)제도를 건립하고 의료인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혁신화된 의료업계의 전문기술인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층(基層) 지방 행정단위 위생전문기술인원의 직급명칭과 등급을 평가·조정한다.



〈그림 5〉 도농 일체화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관련 삽화

출처: 百度圖片

참고
문헌

- 2016.8.2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推进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2016-2018年)”. (http://www.sdpc.gov.cn/gzdt/201608/t20160822_815345.html)
- 2016.8.29. 半岛网. “山东省首推“人道化”屠宰:杀鸡要考虑鸡的感受”. (http://news.bandao.com/news_html/201608/20160829/news_20160829_2660515.shtml)
- 2016.8.29. 盐城新闻网. “中韩盐城产业园区”. (<http://special.ycnews.cn/2016/0829/2368170.shtml>)
- 2016.9.1. 央广网. “我国新增七个自贸区增加差异化试点任务”. (http://finance.cnr.cn/txcj/20160901/t20160901_523103249.shtml)
- 2016.9.12. 大连晚报. “新增7个自贸区各自任务不同辽宁着力提升东北竞争力”. (http://www.dlxw.com/news/content/2016-09/12/content_1814589.htm)
- 2016.10.10. 搜狐网. “人社部:2017年开始建立统一的城乡居民医保制度”. (<http://business.sohu.com/20161010/n469842114.shtml?weqreqreqr>)
- 2016.10.24. 中国城市报. “城乡居民医保并轨指日可待”. (http://paper.people.com.cn/zgcsb/html/2016-10/24/content_1721666.htm)

현대중국의 이해

3. 장정(長征)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3. 장정(長征)

◆ 징강산(井岡山)을 근거지로 한 홍군(紅軍)이 무장투쟁을 통해서 주변 지역으로 근거지를 급속하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 장시성(江西省)과 후난성(湖南省)의 국민당 당국은 물론 국민당 중앙정부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징강산 근거지 타도 및 소멸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림 1〉 홍군 반(反)포위 전쟁 장면

출처: 百度圖片

장제스(蔣介石)는 1928년 11월에 징강산 토벌을 위해 장시성과 후난성의 국민당 군대 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징강산 공비(共匪)소굴” 토벌 공격을 시도했으나, 현지 농민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마오쩌둥(毛澤東)과 주더(朱德)의 전술에 말려들어 4차례의 포위 토벌공격에서 모두 패했다.

일본 관동군이 발동한 상하이 사변(1931.1.28)⁶⁾을 굴욕적인 양보를 통해 마무리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그해(1931년) 5월에 40만명 규모의 대군을 조직 동원하여 중공중앙 소비에트정부의 근거지인 장시성 루이진(瑞金)을 향해 제4차 포위 토벌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1933년 2월에 주더와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야습작전을 지휘해 2개 사단을 섬멸하고, 이어서 당시 국민당군의 최고 정예였던 11사단을 궤멸시키고 격퇴했다.

6) 1931년 9.18 만주사변 발동후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은 국민당 정부와 국제사회에 만주 점령에 대한 승인과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1932년 1월에 다시 “1.28 상하이사변”을 발동했다.

- ◆ 1934년 5월, 일본이 상하이사변의 수습과정에서 국민당 난징(南京)정부를 겁박하여 체결한 탕구협정(塘沽協定) 결과 중국의 화북지구는 제2의 만주(滿洲)가 되어 일본의 지배범위에 편입되었으나, 장제스는 “외적을 물리치기 전에 필히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攘外必先安內)”는 기존 국책을 고수하면서 장시성 루이진의 중공 중앙 소비에트에 대한 제5차 토벌공격을 시작했다.



〈그림 2〉 탕구협정 체결 장면

출처: 百度圖片

- ◆ 장제스의 중공중앙 소비에트 본부를 겨냥한 5차 공격에 대해, 당시 중공중앙을 지휘하고 있던 보구(博古, 본명은 秦邦憲)는 군사 문외한(門外漢)이었으므로 코민테른 추천으로 중공에 파견된 독일인 군사고문 리더(李德, 본명 오토브라운)를 과신하고 군사전권을 리더에게 맡기고 의지했다. 중국의 국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마오쩌둥의 “적을 근거지 깊숙이 끌어 들인 후 격퇴한다”는 유격전술을 “패배주의”나 “도망주의”라 비판하고, 적을 성문 밖에서 막아내고 모든 전선에서 진지전 대 진지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술로 채택하고 밀어 부쳤으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드러났다.

마오쩌둥의 징강산(井岡山) 입산은, 중공 창당 이후 코민테른과 중공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혁명전략을 주도한 소련 유학파가 당연시하고 견지해 온 도시노동자운동 중심의 혁명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농촌과 농민 중심의 새로운

혁명전략의 실천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중공중앙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코민테른과 소련 유학파는 도시노동운동을 중시했으므로, 농촌에 근거지를 건설하고 토지혁명을 통해 농민을 혁명역량으로 조직하여 유격전을 벌이면서 근거지를 구축 및 확대해 나가자는 마오쩌둥의 혁명전략을 “비적(匪賊) 전술” 또는 “산상(山上) 사회주의”라며 비웃고 조롱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창당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장정 초기 구이저우성(貴州省) 준이(遵義)회의에서 당권을 잡기 전까지는 당의 주류파 지도자 대열에 끼지 못했었다.

- ◆ 중공중앙 홍군이 국민당군의 5차 포위토벌 공격을 격퇴하지 못한 원인으로, 1933년 11월에 푸젠성(福建省)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킨 차이팅카이(蔡廷鍇) 지휘하의 국민당 19로군과의 통일전선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림 3〉 국민당 19로군(좌)과 차이팅카이 장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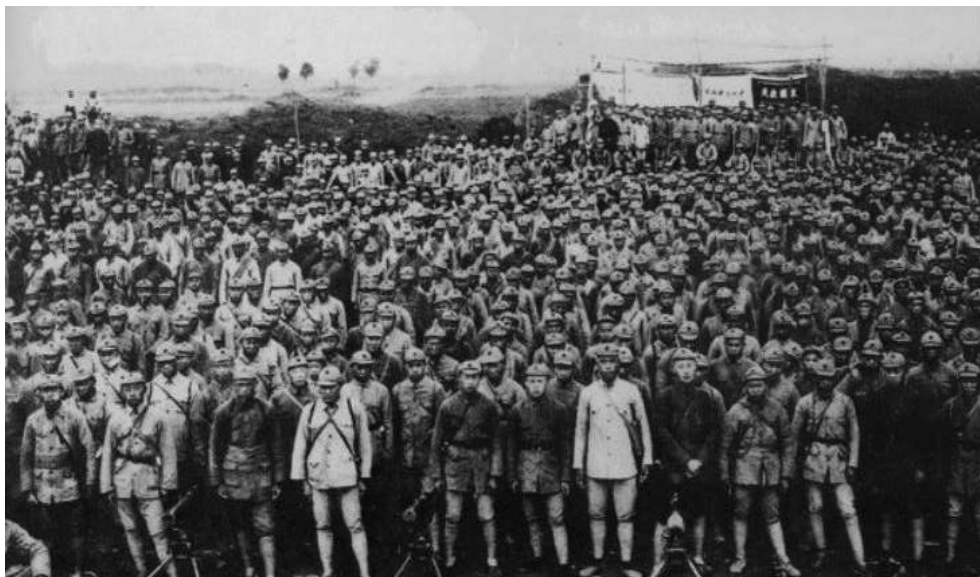
출처: 百度圖片

차이팅카이는 상하이 사변 당시 국민당 19로군을 지휘하여 일본군과 맞서 용감히 싸운 국민적 영웅으로, 일본에 굴욕적으로 협정을 맺은 장제스에 반발해 “항일구국”을 기치로 내걸고 푸젠성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했다.

당시에 마오쩌둥은 홍군주력을 차이팅카이의 혁명군이 장악하고 있던 푸젠성을 둘

러싼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지구로 돌진시켜 전선 외곽에서 차이팅카이(Chiang Kai-shek)의 푸젠정부를 지원하자는 전략방안을 제출했으나 리더(李德: 오토브라운)에 의해 거절당했다.

- ◆ 1934년 1월에 장제스는 차이팅카이의 푸젠혁명정부를 진압한 후, 중공중앙 소비에트 근거지를 겨냥한 제5차 포위토벌 작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100만 군대를 조직 동원하여 포위망을 좁혀왔고, 국민당군의 공세를 감당하지 못한 홍군은 그해 가을에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해 중국 대륙 서쪽 변방지역으로 기약 없이 후퇴하는 대이동을 시작했다.



〈그림 4〉 (루이진)홍군 단체 사진

출처: 百度圖片

1934년 10월에 중공중앙의 근거지인 장시성(江西省) 루이진(瑞金)에서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퇴각한 홍군(紅軍)은 1년여 기간 동안 추격해 오는 국민당 부대와 지방 군벌군대와의 전투, 험난한 지형과 기후 등에 시달리면서 11개 성(省), 18개 산맥과 17개 큰 강을 건너 1만 2,500km(2만 5천리)의 거리를 행군하여, 1935년 10월에 산시성(陝西省) 북부 산악지구인 우치전(烏起鎮)에 도달했다. 이를 중공 홍

군의 “장정(長征)”이라 부른다.

장시성 근거지에서 퇴각할 당시에 10만명 규모였던 홍군 병력이 2만 5천리 장정을 마치고 산시성(陝西省) 북부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8천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 ◆ 객관적으로 2만 5천리 “장정”은 국민당에 비해 군사력 차이가 컸던 홍군 주력부대가 국민당군의 5차례에 걸친 포위토벌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퇴각, 도주한 과정이다. 단, 마오쩌둥은 “장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림 5〉 장정 장면(회화)

출처: 百度圖片

“... 약 1년반 기간중 중공의 3개 홍군 주력이 모두 진지를 바꾸는 대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큰 군사적 손실을 당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이 잠시 부분적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잠시 부분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장궈타오(張國燾) 같은 사람이 말하듯이 ”중앙홍군이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막스주의자는 문제를 볼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 이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에 대해 “하늘의 일 부분은 우물만 하다”고 말하면 맞지만, “하늘이 우물만하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것과 같다. 장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의 진지를 고수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실패이지만, 또 다른 측면, 즉 장정(長征)을 완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승리했다. 적군은 우리의 진지를 점령했다는 측면에서는 승리했으나 포위토벌 계획의 실현이라는 측

면에서는 실패했다. 장정(長征)은 선언서이고, 선전대이고, 파종기(播種機)였다. 천지 개벽 이후 삼황오제 시기부터 오늘까지 역사상 우리와 같은 “장정”이 있었는가? 12개월 내내 낮과 밤 구분 없이 매일 수십대의 비행기가 정찰과 폭격을 해뒀고, 땅에서는 수십만 적군이 포위 추격하며 앞길을 막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두 다리로 2만 5천리, 11개 성(省)을 횡단했다. 역사상 이 같은 장정(長征)이 있었는가? 없었다. 장정은 또한 선언서이다. 장정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장제스의 포위 추격이 파산했음을 선언했다. 장정은 또한 선전대이다. 우리가 거쳐간 11개 성(省)의 2억의 주민 대중에게 홍군이 가는 길만이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전하고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만일, 장정이 없었다면 광대한 민중에게 홍군의 큰 도리(道里)를 그토록 신속하게 선전할 수 있었겠는가? 장정은 또한 파종기(播種機)였다. 우리는 수 많은 종자들을 11개 성내에 퍼뜨렸다. 그 종자들이 싹 트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서 장래에 수확할 때가 올 것이다. 종합하면, 장정은 우리의 승리, 적의 실패로 끝났다. 중국공산당이 없었다면 이 같은 장정은 구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제 혁명전쟁을 영도하는 우리의 능력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기회주의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毛澤東選集第一卷, 1991: 149~150쪽)

- ◆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장정(長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장정 초기인 1935년 1월에 홍군이 구이저우성(貴州省) 쑤이(遵義)를 점령한 후 개최한 중공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을 중공중앙의 영도자로 선출한 것이다. 이로써 마오쩌둥이 중공중앙의 지휘권과 권력기반을 강화하면서 중국 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아마코 사토시 · 임상범 옮김(2016), 『중화인민공화국사』, 일조각.
- 성균중국연구소 엮음(2014),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 조관희(2013), 『중국현대사 강의』, 궁리.
- 현이섭(2012), 『중국지(상,하)』, 인카운터.
- 서진영(1992), 『중국혁명사』, 한울아카데미.
-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 Ross Terrill · 胡爲雄 외역(2009), 『Mao: A Biography 毛澤東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柯延主編(2004), 『毛澤東生平全記錄(上)』,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1996), 『毛澤東傳(上)』, 中央文獻出版社.
- 陳志平主編(1993), 『中國革命史』,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毛澤東著(1991), 『毛澤東選集第一卷』, 人民出版社.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13 · 14 · 15회
충청중국포럼

>> 제13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 지난 8월 31일(수),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 홍원표 박사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제13회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됐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정책기획실 강수진, 김성환, 서지석 주무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조능호 대외협력팀장, 논산시 전략기획실 김관기 국제교류팀장,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임향미 주무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상균 박사 등이 참석했다.

홍원표 박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개요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노력을 개괄하고 충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림 1〉 홍원표 박사 강연 모습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3년 9월에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권”에 대해 언급하고 동년 10월에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21세기판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한 후,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주로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로 구성된다. 2016년 6월 기준, 중국은 3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브릭스(BRICS)신개발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일대일로” 전략의 실시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 국내 산업 공급과잉 문제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외수출 시장 개척;
- 둘째, 미국 주도의 대(對)중 포위전략을 돌파하기 위한 반(反)포위전략;
- 셋째, 중국 동서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 에너지 획득 및 안정적 수송 통로 확보이다.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유라시아 국제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이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기치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라시아 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통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고, 북극항로의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양 끝의 해상연계와 전략·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북3성은 노후공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왔고 개혁개방 물결에서 제외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발달 지역으로 인식된다. 그 중 랴오닝성(遼寧省)의 경제력은 지린성(吉林省)이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비해 나은 상황이나 최근에는 동북지역 중에서도 경제침체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돌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지역의 낙후한 중공업기지를 현대식 산업지구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동북진흥” 전략을 실행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의 성장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서 동북3성은 북방 대외개방창구 역할을 맡게 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동북지역의 교통요지이자 유라시아 대륙교(大陸橋)의 중요한 관문이다. “일대일로”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접점지역으로서 따론펬(大連)/잉커우(營口)-만저우리(滿洲里)-러시아-유럽(즉, 遼滿歐), 단둥(丹東)/진저우(錦州)-초이발산-러시아-유럽(즉, 遼蒙歐), 따론펬-베링해(남중국해)-유럽(즉, 遼海歐) 등 노선이 개통될 것이다.

지린성은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항구가 없는 지린성은 두만강 하류를 이용하여 동해로 진출코자 두만강 하류의 훈춘(琿春)을 관문으로 설정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 중, 헤이룽장성은 2015년 “룽강실크로드지대(龍江絲路帶)”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하얼빈(哈爾濱)을 접점으로 하여 블라디보스톡, 창춘(長春), 몽골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과 연결되는 육로와 수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 충남은 수도권 외곽으로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타 지역 및 일본, 미국을 중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백제 근초고왕 시대에 중국 대륙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었는데 과거처럼 충남은 중·일 간 물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항만·공항 등 하드웨어 네트워크에서 충남의 존재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야에서 강점을 키워야 한다.

- ◆ 홍원표 박사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도 정책기획관실 김성환 주무관은 충남지역에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어떤 방식을 통해 연계·추진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홍박사는 충남은 위치우세를 적극 이용하여, 한·중·러·몽·북한 간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충남과 중국 간의 한·중 열차페리나 한·중 해저 터널 프로젝트는 과거 검토되었으나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 되었다고 답변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박인성 박사는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육로

축인 “일대(一帶)”와 해로축인 “일로(一路)” 모두 서쪽 방향 추진전략만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관심있는 동쪽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중국 동북3성의 “일대일로”연계전략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정리하고 짚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발표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조능호 대외협력팀장,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임향미 주무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상균박사는 충남과 중국 간의 관광, 유교(儒敎), 인문교류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 협력 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그림 2〉 제13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제14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 지난 9월 28일(수),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박인성 팀장의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이란 주제로 제14회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되었다.

박인성 팀장은 환황해권 형성·발전의 핵심 동력은 중국의 굴기이므로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의 환황해권 전략의 초점을 중국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큰 나라이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중국 중에서도 충남과 인접한 ‘환보하이권’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 환보하이권지의 범위, 개황, 발전전망과 과제 그리고 충남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송두범 단장, 충남도 정책기획실 강수진 사무관, 김성환, 서지석 주무관, 청양군 행정지원과 조현섭 교류협력새마을팀장 등이 참석했다.



〈그림 3〉 박인성 팀장 강연 모습

◆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수출 동향 중 가장 주목되는 변화 동향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지위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다.

2000-201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 점유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미국 시장은 2000년 22%에서 2014년에는 12%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 시장은 2000년 11%에서 2014년에는 25%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충남의 수출액 중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44.6%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국수준의 약 2배에 달했다. 따라서 충남은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형성되어 흘러 들어오는 '외부동력'을 활용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소위 '환황해경제권'이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우리의 서해와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에 인접한 역내 국가 간에 지리적 인접성을 기초로 형성·발전하고 있는 소지역 시장권 또는 국지경제권을 가리킨다.

◆ 우리의 '서해'와 인접한 중국의 바다는 '황하이'인데, 그 안에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반도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이자 규모가 큰 만(灣)인 '보하이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하이만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포함하는 화북평원과 북으로 랴오둥반도, 남으로 산둥반도와 접하고 있다. '환보하이(環渤海)지구'는 베이징, 텐진 양대 중심 도시를 둘러싼 텐진 빈하이신구,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 산둥성 황하삼각주, 허베이 차오페이디엔(曹妃甸)신구 그리고 허베이 보하이신구 5대 지대를 포함한다. 이 지구 내의 주요 중심도시는 베이징, 텐진(天津), 선양(沈陽), 따리엔(大連), 지난(濟南), 칭다오(青島), 바오딩(保定), 스자좡(石家莊)등이다. 이 지구는 중국 전국 인구의 17.8%, 국토면적의 5.4%를 점한다.

◆ 중국의 환보하이연해지구 발전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 동부연해지구 내에서도 남북간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중국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중점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부터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수립 발표한 '13차 5개년계획(十三五規劃: 2016-2020)'에서는 '징진지(京津冀)' 협조발전을 3대 지역발전전략 중 하나로 제

시했으며 2011년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하고, 해양경제 확대 관련 중점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환황해경제권’의 형성·발전에 따라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 ◆ 대내적으로 충남경제의 기본 동력은 수도권 규제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구축된 제조업과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부품 및 중간재의 대(對)중국 수출 특수 혜택이었다.
- ◆ 대외적으로 충남경제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43.9%이고 타이완과 홍콩지구까지 포함하면 3/5의 비중을 점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신상태(新常態)’ 기조로 전변하면서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특수효과가 급감했다.
충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제철도 악화 추세이며, 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위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를 중국 대륙전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하위단계의 세부 전략의 구체성과 실천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이 부족하다. 또한 계획 및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중국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을 충남의 입장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 ◆ 중국은 큰 나라여서, 대부분 성(省)의 인구 규모와 면적이 우리나라 전국 규모보다 크다. 따라서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수립 대상을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는 중국의 황하이·보하이연해지구와 서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과 ‘징진지’ 지구 내의 허베이성과 20여년 간 유지해 온 자매결연 관계와 산동성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 한편으로는 ‘환황해시대’라는 큰 흐름에 적응, 편승하면서 충남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등 함께 흘러 들어오는 부정적 요인들에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향식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형 대(對)중국 전략 구축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황하이 및 보하이 연해지구 도시들과 우호협력 교류 합작 관계를 구축·활성화하면서, 중국과 연결된 지역발전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둘째, 현안 과제와 사업들에 대해 자력 추진 가능한 것과 중앙의 예산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화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함과 동시에 실천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기회와 함께 위협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넷째, 한중 지방간 교류 협력 확대가 한-중-북 지방 차원 삼각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對)중국 전략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창출된 이익을 지방과 주민에 귀속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림 4〉 제14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박인성 팀장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도 정책기획관실 김성환 주무관, 청양군 행정지원과의 조현섭 교류협력새마을팀장, 충남연구원 송두범 단장, 홍원표 팀장,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 관련 부서 간의 협력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도 및 산하 시·군의 협력 방향, 역할, 방안, 전략 등에 대해 토론했다.

>> 제15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지난 10월 26일(수),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서동욱 과장의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제15회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됐다.

태안군 기획감사실 명승식 대외협력팀장과 조현정 주무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능호 대외협력팀장,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강지호 대전사무소장, 장남진 주무관과 박세진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서동욱 과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과 분쟁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림 5〉 서동욱 과장 강연 모습

◆ 중국은 2007년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24.5만 건밖에 없었지만 2011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15년 중국의 발명특허 건수는 110.2만 건에 달했고 미국(57.9만 건)에 비해 2배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2007년 70.8만 건에서 2015년 287.6만 건으로 증가했다.

◆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둘째, 세계경제의 소비시장으로 역할 확대;

셋째, 7대 신흥전략 산업 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중국의 출원 장려 정책(세금, 감면, 대출)이다.

◆ 중국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2008년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강요’를 수립했고,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수준을 이기 위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 등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지식재산,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발표했다.

2011년 10월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발표했는데 계획의 내용은 지식재산권 사업발전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상업화에 세제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개선과 산학연계를 통한 국가혁신 시스템을 건설하며, 연구개발비용 관리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22개월로, 상표출원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년 12월 ‘국가 지식재산권 심층 전략행동계획(2014-2020)’을 시행하고, 2020년 달성 목표를 인구 1만명당 특허보유 건수 14건으로 상향시키고(2013년 4건), 국제 특허출원 건수 7.5만건으로 증가시키며(2013년 2.2만건), 전국 기술시장 거래총액과 지식재산권담보 융자금액 각각 2조 위안(360조원), 1800억 위안(32.4조원)으로 인상한다고 설정했다.

올해 4월에는 ‘2016년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실시 계획’을 공표하고 주요 계획 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의 질적 수준 향상(심사의 질 향상 및 평가시스템 강화), 전략적 신홍산업 지식재산권 업무와 기술이전 및 상업화 가속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침해 단속 실시 및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관리 및 대중(大衆) 서비스 수준 향상(관리규정 등 체제 정비),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수준 향상이다.

- ◆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화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관련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화리통신(华立通信) 간의 특허 분쟁 관련 소송, 애플과 삼성 간의 디스플레이 관련 소송, 정관장 · 락앤락, LG의 모조품 제조유통 관련 소송, KBS · 케피코 · 삼성(삼성) 등의 상표 선등록 관련 소송 등이 있다. 향후 선진국 및 중국 간의 무역공세 가 반덤핑공세에서 지식재산권공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환경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중국 특유의 공산당 지배구조와 중국의 특색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핵심권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6〉 제15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서동욱 과장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태안군 명승식 대외협력팀장과 당진시 조능호 대외협력팀장은 태안군과 당진시에서도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은 최근에 상하이시 칭푸구(靑浦區)를 방문하여 추진한 상호교류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충남연구원 박인성 중국연구팀장, 충남연구원 홍원표 미래연구팀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남의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충남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대중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16회 충청중국포럼은 11월 30일(수) 오후 14시 30분부터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이주호 박사님(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중 물류분야 협력 현황과 충남의 과제”란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중국연구팀(041-840-1175, neong@cni.re.kr)

발간 목록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6.10)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